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EAI 여론분석 시리즈 ③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지은이 이내영 · 이현우 · 김장수 공편

발행자 이흥구

발행처 (재) 동아시아연구원

편 집 이상협 · 주영아

디자인 김민주

표지 디자인 송성재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전화 02-2277-1683 (대)

팩스 02-2277-1684

홈페이지 www.eai.or.kr

등록 제2-3612호 (02.10.7)

값 17,000원

ISBN 89-92395-02-1 (93300)

제 2 부

패널조사에 나타난 유권자 표심변화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지방선거

정원철 · 정한울

서론

2007년 대선을 한 해 앞두고 실시한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

〈표1〉 5·31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명)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무소속	합계
시·도지사	1	12	2	-	-	1	16
구·시·군의 장	19	155	20	-	7	29	230
시·도 의원							
지역구	33	519	71	5	13	14	655
비례대표	19	38	9	10	2	-	78
교육의원	-	-	-	-	-	5	5
구·시·군 의원							
지역구	543	1,401	233	52	56	228	2,513
비례대표	87	220	43	14	11	-	375
계	702	2,345	378	81	89	277	3,872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2006)

〈표2〉 5·31 지방선거 정당별 득표율 현황

(단위 : 득표수는 명, 득표율은 %)

구분	시·도지사	득표율 (%)	구·시·군의 장	득표율 (%)	지역구 시·도의원	득표율 (%)	비례대표 시·도의원	득표율 (%)	지역구 구·시·군의 의원	득표율 (%)	비례대표 구·시·군의 의원	득표율 (%)
합계	18,857,606	100.0	18,510,816	100.0	18,288,800	100.0	18,763,078	100.0	18,316,161	100.0	17,444,314	100.0
열린우리당	5,106,984	27.1	4,277,001	23.1	4,329,794	23.7	4,056,367	21.6	3,544,024	19.3	4,196,455	24.1
한나라당	10,418,021	55.2	9,396,305	50.8	9,291,686	50.8	10,086,354	53.8	8,317,356	45.4	9,422,971	54.0
민주당	1,709,452	9.1	1,530,908	8.3	1,602,034	8.8	1,863,239	9.9	1,575,921	8.6	1,792,908	10.3
민주노동당	1,099,592	5.8	648,353	3.5	507,157	2.8	2,263,051	12.1	1,072,826	5.9	1,655,305	9.5
국민중심당	345,295	1.8	403,464	2.2	408,610	2.2	436,774	2.3	390,755	2.1	376,675	2.2
시민당	4,790	-	482	-	-	-	7,588	-	455	-	-	-
한미준	7,188	-	4,176	-	-	-	5,112	-	2,708	-	-	-
희망사회당	0	-	-	-	6,039	-	44,598	0.2	2,189	-	-	-
무소속	166,284	0.9	2,250,127	12.2	2,143,480	11.7	-	-	3,410,937	18.6	-	-

자료 :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2006)

우리당의 참패,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선거 중 전북에서 한 석을 건졌을 뿐이며 광역의회·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고전을 했다. 반면 2002년 대선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 패배를 했던 한나라당의 경우 광역단체장·광역의회·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정치적 대승리를 거두었다. 〈표2〉의 득표율 차원에서 보더라도 각급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0%대의 고른 지지를 받은 반면 열린우리당이 얻은 득표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7대 총선에서 여당에 과반의석을 선사했던 국민들의 표심이 불과 2년 사이에 그 경쟁당인 한나라당으로 이동한 변화 자체가 학문적·정치적 흥밋거리임과 동시에 그 동안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를 설명해 온 지역·이념·세대·정당 투표이론 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급격한 투표선호의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집합적 수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3절에서는 표심의 급격한 변화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집중으로 이어진 요인들을 정리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이후 정국에 미칠 정치적 함의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다.

패널조사에 나타난 유권자 표심변화

앞에서 패널조사 방법론에 대해 검토한 데 이어 여기에서는 패널조사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패널조사의 장점을 살펴 매 조사마다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표의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 조사 차수마다의 지지율 변동추세를 살펴본 후 실질적인 표

의 이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표의 이동 방향과 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표선호 변화의 역동성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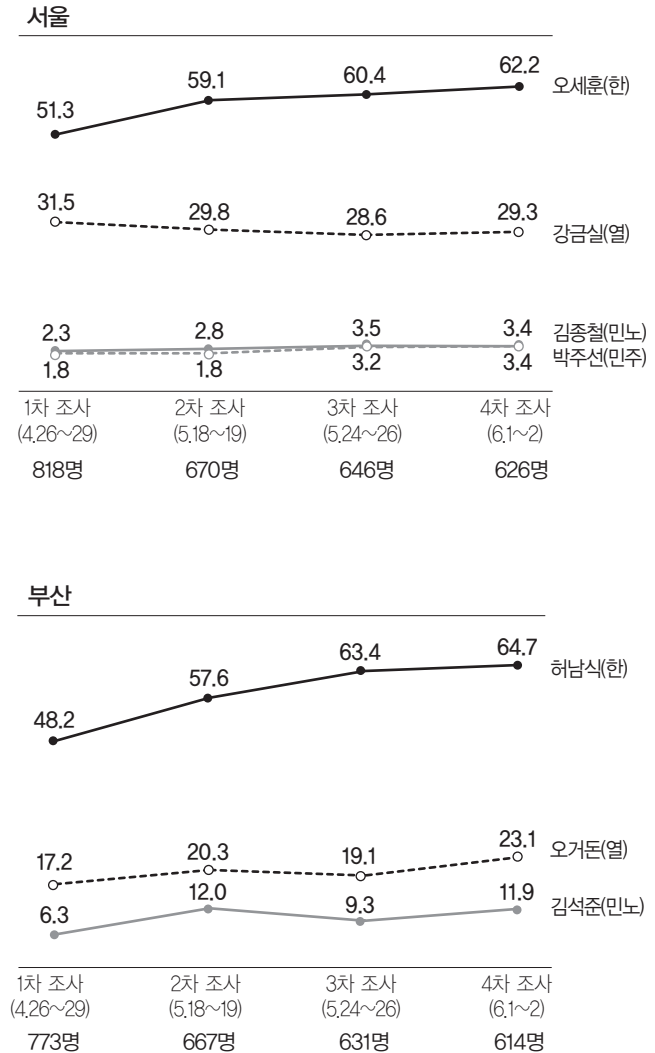
후보지지의 변화 : 한나라당 지지율 상승, 열린우리당 지지율 침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선거와는 달리 선거초반에 형성된 지지관세가 시종 일관 지속되면서 특별한 이변이 없이 끝났다. 오히려 이변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여당 지지층의 와해와 한나라당으로의 표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압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네 차례에 걸쳐 네 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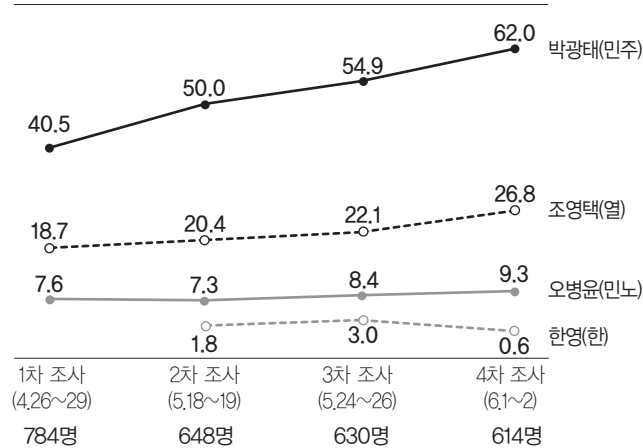
우선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4월 25일 실시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당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1차 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강금실 후보와 19.7% 포인트 격차를 만들어냈다. 이후 2차 조사 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 59.1%, 강금실 후보 29.8%의 지지율로 두 후보 격차가 29.3% 포인트로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실시된 3차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31.8% 포인트로까지 벌어지면서 오세훈 후보의 압승을 예고했고 선거결과 역시 오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지지율이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지지율의 두 배를 웃돌면서 한나라당 텃밭 지역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신지역으로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적지 않았고 여당이 정치적 기반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1순위 지역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임에 틀림없다.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장관출신인 오거돈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열세를 뒤집기 위하여 선거 중반에 문재인 수석이 지역주의 유발이라는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참여정부는 경상도 정권’이라며 이 지역의 민심을 돌려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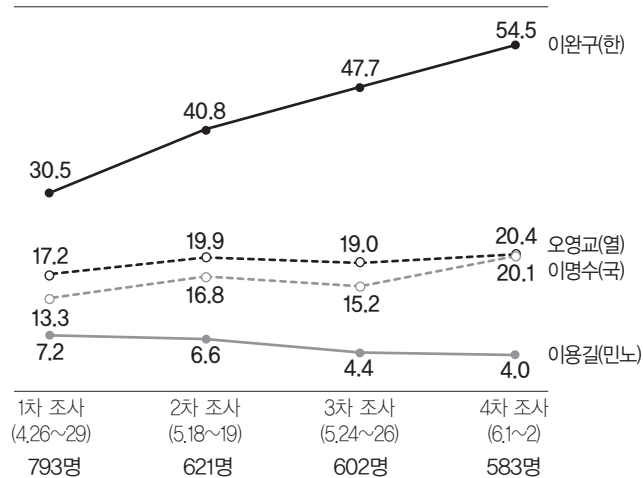
〈그림1〉 지역별 후보 지지변화(%)



광주



충남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매 조사 차수 별 가중치 부여)

주) '기타후보 지지', '지지후보 없음(기권)',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고 했지만 결국 역부족을 실감해야 했다.

한편 2004년 탄핵을 주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아 민주노동당에 이어 제4당으로 전략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지역 유권자의 투표선호 변화를 추적해 보면 열린우리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아래로부터의 경선제까지 스스로 접으면서 조영택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무리수까지 두었지만, 결국 현 정부의 최대 지역기반인 호남의 한복판에서 민주당 박광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또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래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치적 기반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서도 열린우리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인식이 지역에 확산되면서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다수 낙선했던 충남의 1차 조사에서는 네 개 지역 중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30%)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의 지지율은 탄력을 받으면서 급상승했고, 열린우리당의 오영교 후보는 결국 최종 투표에서 국민중심당의 이명수 후보에게 2위 자리까지 내주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로의 급격한 표쏠림 현상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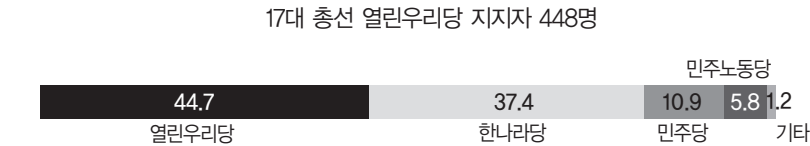
후보지지의 이동 : 여당 지지층 이탈과 반(反)한나라당 정서 약화

패널조사는 유권자 개인의 투표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 지지층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이탈표를 중심으로 '반한나라당 정서'가 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지 그 변화를 추적하고,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지역 패널응답자들의 투표선호가 네 차

레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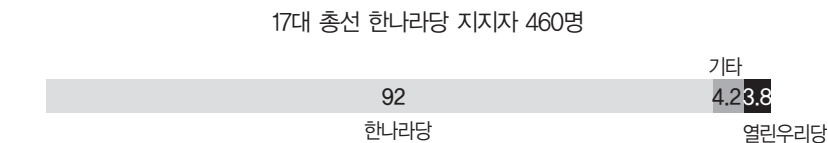
여당 지지층의 이탈과 반한나라당 정서의 약화 현상은 2004년 총선에서의 투표성향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지지했던 정당과 2006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한 정당을 교차분석한 결과가 <그림2>와 <그림3>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92%에 달했지만, 2004년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응답자 중 열린우리당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한 응답자는 44.7%에 불과하고 무려 37.4%나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섰다. 열린우리당 후보 지지층의 반한나라당 정서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기타 정당 지지나 기권까지 포함하면

<그림2> 17대 총선 지지와 2006년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 열린우리당 지지자(%)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1차 조사 데이터(1차 조사 가중치 부여)

<그림3> 17대 총선 지지와 2006년 광역단체장 투표 정당 - 한나라당 지지자(%)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1차 조사 데이터(1차 조사 가중치 부여)

무려 55.3%가 열린우리당 지지를 철회한 셈이다.

분석의 시간대를 좁혀 지방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3>에서 <표6>까지는 네 지역에서 네 번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후보 변화과정을 조사한 결과이다. 선거운동 초기 지지후보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지후보 변화과정을 추적해보면 열린우리당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 지지자의 결집력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 강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유지 비율이 계속해서 90%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단지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효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세훈 후보는 강금실 후보 및 기타 후

<표3> 서울에서의 후보지지 변동¹⁾

		강금실에게로		오세훈에게로		박주선에게로		김종철에게로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1차 조사 (4.26~29)	강금실(166)에서	82.5	137	13.3	22	1.2	2	1.2	2
	오세훈(297)에서	2.4	7	92.3	274	0.3	1	0.7	2
	박주선(7)에서	0.0	0	28.6	2	57.1	4	0.0	0
2차 조사 (5.18~19)	김종철(11)에서	9.1	1	18.2	2	0	0	54.5	6
	강금실(158)에서	85.4	135	8.2	13	0.6	1	1.3	2
	오세훈(330)에서	3.6	12	93.3	308	0.6	2	1.2	4
3차 조사 (5.24~26)	박주선(8)에서	0.0	0	0.0	0	62.5	5	0.0	0
	김종철(14)에서	0.0	0	14.3	2	0.0	0	78.6	11
	강금실(133)에서	90.2	120	6.8	9	2.3	3	0.0	0
4차 조사 (6.1~2)	오세훈(315)에서	3.8	12	95.2	300	0.3	1	0.3	1
	박주선(10)에서	10.0	1	20.0	2	70.0	7	0.0	0
	김종철(14)에서	21.4	3	0.0	0	0.0	0	71.4	10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서울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주) '기타후보 지지', '지지후보 없음(기권)',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표4〉 부산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오거돈에게로		허남식에게로		김석준에게로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1차 조사 오거돈(116)에서 (4.26~29) 허남식(277)에서 ~ 2차 조사 (5.18~19) 김석준(44)에서	74.1	86	14.7	17	6.0	7
	3.2	9	91.7	254	1.1	3
	4.5	2	6.8	3	79.5	35
2차 조사 오거돈(122)에서 (5.18~19) 허남식(329)에서 ~ 3차 조사 (5.24~26) 김석준(64)에서	79.5	97	10.7	13	3.3	4
	2.7	9	94.8	312	0.9	3
	10.9	7	10.9	7	73.4	47
3차 조사 오거돈(98)에서 (5.24~26) 허남식(316)에서 ~ 4차 조사 (6.1~2) 김석준(53)에서	86.7	85	8.2	8	5.1	5
	5.4	17	90.8	287	3.8	12
	11.3	6	7.5	4	79.2	42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부산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주) '기타후보 지지', '지지후보 없음(기권)',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표5〉 광주에서의 후보지지 변동²⁾

	조영택에게로		한영에게로		박광태에게로		오병윤에게로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1차 조사 조영택(105)에서 (4.26~29) 진선수(10)에서 ~ 2차 조사 박광태(231)에서 (5.18~19) 오병윤(44)에서	58.1	61	1.9	2	18.1	19	4.8	5
	10.0	1	30.0	3	30.0	3	10.0	1
	5.2	12	0.4	1	88.7	205	0.4	1
	13.6	6	0.0	0	11.4	5	63.6	28
2차 조사 조영택(116)에서 (5.18~19) 한 영(9)에서 ~ 3차 조사 박광태(277)에서 (5.24~26) 오병윤(46)에서	83.6	97	0.0	0	7.8	9	2.6	3
	0.0	0	66.7	6	11.1	1	0.0	0
	3.6	10	1.8	5	90.3	250	0.4	1
	2.2	1	6.5	3	4.3	2	73.9	34
3차 조사 조영택(119)에서 (5.24~26) 한 영(13)에서 ~ 4차 조사 박광태(258)에서 (6.1~2) 오병윤(39)에서	85.7	102	0.0	0	11.8	14	2.5	3
	30.8	4	30.8	4	30.8	4	7.7	1
	4.7	12	0.4	1	93.4	241	1.2	3
	12.8	5	0.0	0	7.7	3	79.5	31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광주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주) '기타후보 지지', '지지후보 없음(기권)',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표6〉 충남에서의 후보지지 변동

	오영교에게로		이완구에게로		이용길에게로		이명수에게로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1차 조사 오영교(95)에서 (4.26~29) 이완구(192)에서 ~ 2차 조사 이용길(38)에서 (5.18~19) 이명수(66)에서	68.4	65	10.5	10	1.1	1	10.5	10
	3.1	6	84.4	162	1.6	3	4.7	9
	7.9	3	13.2	5	44.7	17	10.5	4
	6.1	4	12.1	8	4.5	3	74.2	49
2차 조사 오영교(115)에서 (5.18~19) 이완구(225)에서 ~ 3차 조사 이용길(28)에서 (5.24~26) 이명수(95)에서	73.9	85	16.5	19	0.0	0	0.9	1
	1.3	3	91.6	206	0.9	2	2.2	5
	17.9	5	10.7	3	57.1	16	3.6	10.7
	3.2	3	11.6	11	1.1	1	73.7	70
3차 조사 오영교(93)에서 (5.24~26) 이완구(247)에서 ~ 4차 조사 이용길(18)에서 (6.1~2) 이명수(86)에서	83.9	78	10.8	10	0.0	0	4.3	4
	3.2	8	91.5	226	0.0	0	4.5	11
	5.6	1	27.8	5	61.1	11	5.6	1
	7.0	6	11.6	10	3.5	3	76.7	66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충남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주) '기타후보 지지', '지지후보 없음(기권)',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보 지지층으로부터 이탈한 유권자들을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탈 비율로 봐도 강 후보로부터 오 후보로 이탈하는 비율은 매회 6.8%~13.3%에 이른 반면 오 후보에서 강 후보로 이탈한 비율은 2.4%~3.8%에 그치고 있다.

부산에서도 1차 조사 시점부터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 대한 견고한 지지자의 결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조사에서 오거돈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74.1%가 2차 조사에서도 오 후보를 지지했고, 2차와 3차 조사 사이에는 79.5%, 3차와 4차 조사에서는 86.9%로 표의 결집도가 높아졌다. 이는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시기가 주로 선거 초중반에 집중되어 후반기로 갈수록 핵심지지층만 남은 결과로 보인다. 반면 허남식 후보의 경우 매 회마다 역시 90% 이상이 그대로 허 후보 지지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오 후보와 허 후보 간의 이탈률을 보면 확실히 허남식 후보로의 이탈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의 경우 민주당 박광태 후보에 대한 지지자의 결집력이 조사 전 시점에

서 강세를 유지했다. 마찬가지로 박광태 후보 지지에서 조영택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은 최고 5.2%에 불과했지만, 조영택 후보 지지에서 박광태 후보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는 2차 조사시점에서는 18.1%, 3차 조사시점에서는 7.8%, 마지막 4차 조사 시점에서는 11.8%로 늘어나는 등 투표이동의 이익은 역시 박광태 후보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한나라당 이완구 후보에 대한 지지자의 결집력이 1차 조사시점부터 강했다. 열린우리당의 오영교 후보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고정투표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이완구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중심당의 이명수 후보의 경우는 74~76% 대의 고른 지지 결집력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 광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 중 한나라당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지역 조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애초 가정한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후보 지지층의 이탈규모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층의 이탈규모보다 훨씬 두드러졌다. 이러한 정당 충성심의 차이가 선거결과 여당의 패배와 한나라당의 대승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둘째, 여당 후보 지지층의 이탈방향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여당의 지지층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이탈자의 대다수가 한나라당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반한나라당 정서의 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정당재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유권자의 지지후보 교체는 선거 국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기존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1, 2위를 다투는 유력 정당보다는 군소정당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는 소위 사표(死票)방지심리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투표행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³⁾

표심리의 원인 분석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선거 초기부터 여당 후보의 열세와 야당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이러한 격차는 선거운동과정을 거치면서 더 커졌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여야 후보 간 격차를 만들어 낸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보고 선거운동을 거치면서 양당간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거의 판세를 결정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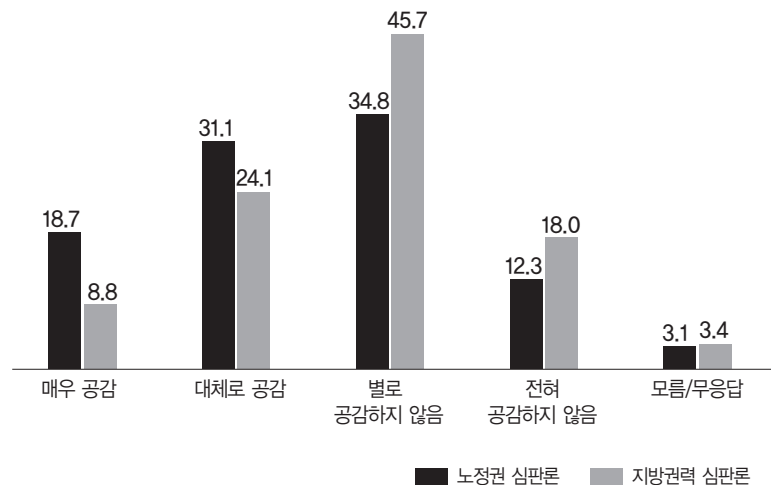
노무현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실망 2006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노무현 정권 심판론’과 ‘지방정부 심판론’의 대결에서 ‘노무현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선거 캠페인과 ‘부패한 지방권력을 교체하기 위해 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비교해보면 ‘노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로부터 보다 큰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4>에서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와 지방권력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를 비교해 보면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가 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과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을 합치면 노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49.8%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지방권력 심판론에 대해서는 32.9%만이 공감한다고 밝혀 대략 17%p 가량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⁴⁾

보다 직접적으로 ‘열린우리당이 패배하고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실망이 선거결과를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패널조사 2차 데이터를 분석한 <그림5>를 보면 ‘노 대통령과 정부가 못해서’라는 응답이 58.6%, ‘열린우리당이 못해서’라고 답한 사람은 29.2%로 현 정부 및 여당의 책임을 지적한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7.8%에 달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보다 좋아서’는 4.4%, ‘한나라당

이 잘해서' 라는 응답은 3.0%에 그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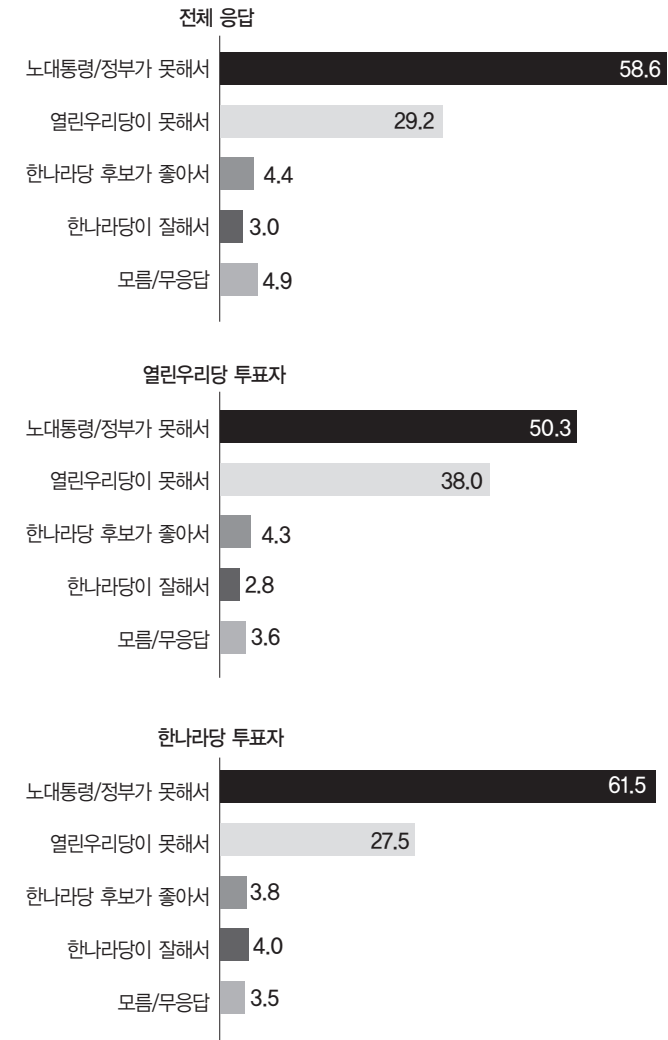
최종 투표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경우 61.5%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해 현직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고, '한나라당 후보가 좋아서' 라는 응답은 3.8%, '한나라당이 잘해서' 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조차 선거결과를 가져온 일차적인 요인이 여당에 대한 불만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 중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꼽은 사람들이 50.3%에 달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중(38%)이 한나라당 지지자의 경우(27.5%)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차별화도 아니고 계승도 아닌 상태로 표류해

〈그림4〉 노무현 정권 심판론 대 지방권력 심판론(%)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1차 조사 데이터(1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 1차 조사표본 : 1,299명

〈그림5〉 지방선거 결과의 원인(%)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2차 조사 데이터(2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 2차 조사표본 : 1,001명, 여당 투표자 : 198명, 한나라당 투표자 : 521명

은 여당 역시 선거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가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노무현 정부 국정평가에 따라 투표선호가 엇갈릴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만족할수록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일수록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표7〉은 국정운영 평가별로 각 지역 1, 2위 후보 간의 지지율 및 그 격차의 조사차수 간 변화를 보여준다. 결과는 열린우리당 참패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결과에 노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가정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일수록 부정적인 집단에 비해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반대로 부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집단에 비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한 가지 해석에 주의를 요할 점은 시간이 갈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집단 내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고, 열린우리당 지지층 내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현상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선거운동이 정당일체감처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을 활성화시킨다는 활성화가설(activation hypothesis)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 지지층이나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서조차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선거운동과정이 유권자 개인에게 내면화된 정치적 성향을 활성화시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없게 만든다.⁵⁾ 즉 선거운동을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적 성향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승리: 노력 반 반사이익 반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승리는 어떻게 설명

〈표7〉 국정평가와 정권 인식이 주요 후보의 지지에 미친 영향(% , %p)

지역별	국정평가	후보 간 비교	1차 조사 (4.26~29)	2차 조사 (5.18~19)	3차 조사 (5.24~26)	4차 조사 (6.1~2)
서울	긍정적	강금실(A)	56.5	55.4	44.9	54.5
		오세훈(B)	27.1	36.0	44.4	35.5
		(A) - (B)	29.4	19.4	0.5	19.0
	부정적	강금실(A)	20.4	19.9	19.6	22.6
		오세훈(B)	62.1	67.9	68.3	69.0
		(A) - (B)	-41.7	-48.0	-48.7	-46.4
부산	긍정적	오거돈(A)	33.0	32.1	30.0	44.1
		허남식(B)	35.7	46.5	46.2	49.6
		(A) - (B)	-2.7	-14.4	-16.2	-5.5
	부정적	오거돈(A)	11.7	13.4	14.5	15.8
		허남식(B)	57.8	65.7	73.2	72.9
		(A) - (B)	-46.1	-52.3	-58.7	-57.1
광주	긍정적	조영택(A)	25.0	29.5	34.6	35.3
		박광태(B)	32.5	42.9	50.0	54.4
		(A) - (B)	-7.5	-13.4	-15.4	-19.1
	부정적	조영택(A)	12.5	12.8	11.2	22.1
		박광태(B)	47.1	58.4	60.1	66.1
		(A) - (B)	-34.6	-45.6	-48.9	-44.0
충남	긍정적	오영교(A)	30.2	34.2	35.2	38.6
		이완구(B)	19.0	24.7	32.4	38.0
		(A) - (B)	11.2	9.5	2.8	0.6
	부정적	오영교(A)	9.3	12.2	9.5	12.0
		이완구(B)	38.4	49.6	57.3	62.3
		(A) - (B)	-29.1	-37.4	-47.8	-61.1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매 조사 차수 별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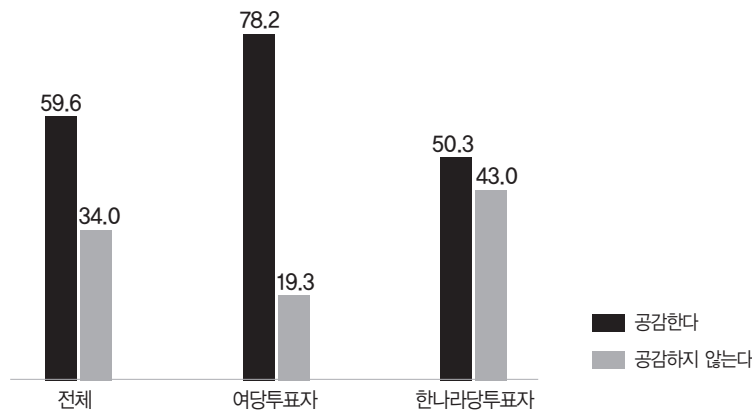
주) 수치는 매 조사마다의 국정평가와 후보 지지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 중 여당 후보와 1위 야당 후보의 지지율(%), (A)-(B)의 단위는 (%p).

할 수 있을까? 즉 여당에 대해 실망한 여당 지지층과 기타 중간층이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한나라당이 탄핵사태로 17대 총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의 개혁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선거에서도 다

양한 방식의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전체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한나라당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한나라당 요인보다는 노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를 꼽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온전히 한나라당의 업적이나 그들의 노력만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국정실패에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도 한몫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야당이나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의 반대와 발목잡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그림6> 야당 및 보수언론·단체의 발목잡기가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미친 영향(%)



자료: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 여론조사(2006), 2차 조사 데이터(2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1) 2차 조사표본: 1,001명

2)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9.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 후보를 끝까지 지지한 응답자(78.2%) 뿐 아니라 심지어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50.3%)이 야당 및 보수단체의 발목잡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은 자력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실망 및 비판인식이 한나라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실망의 원인

국정운영능력과 방식이 문제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와 열린우리당의 패배를 가져온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노성향처럼 선거 이전에 형성된 정치적 성향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활성화된다는 활성화가설은 유권자들의 한나라당 지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화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활성화가설이 성립한다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최소한 여당과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당에 대한 지지경향이 활성화되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형의 지지층조차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한다. 우선 선거결과가 참여정부 및 여당의 이념적 성향과 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라는 해석이다. 이념성향과 노선의 문제를 진단함에 있어서도 상반된 정치적 해석이 존재한다. 야당과 보수층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좌파 친북 개혁노선의 실패’로 규정내린 반면 여당 일부와 진보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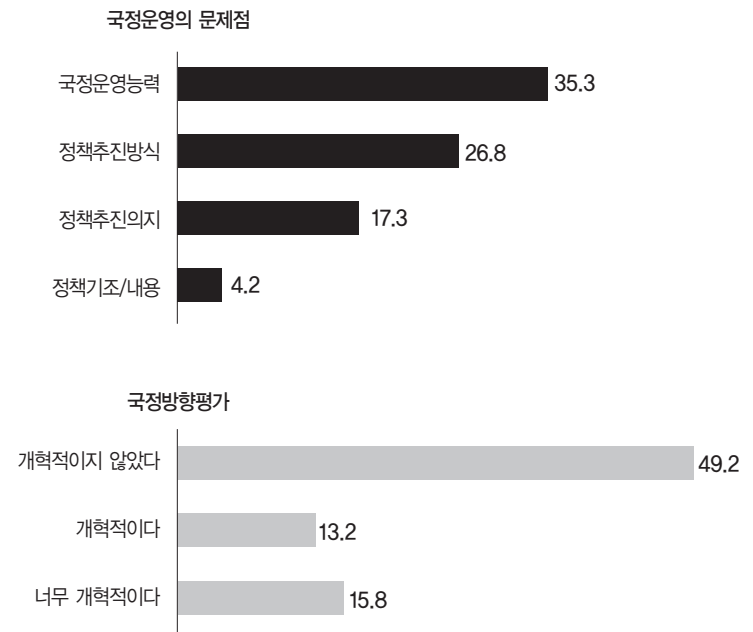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불철저한 개혁의 실패’로 규정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정책과 노선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국정운영능력과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을 문제로 지적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할 경우 개혁노선의 강화보다는 실용노선으로의 전환과 보다 일관된 정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 국정운영능력과 정책추진방법에 대한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7>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정책기조(4.2%)와 정책추진의지(17.3%)보다는 국정운영능력(35.3%)과 정책추진방식(26.8%)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나 보수적 언론과 정치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이념적인 이슈보다는 실적에 기초하여 합의가 가능한 실용적인 현안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고 새로운 지지층을 확대하는 핵심관건이 된다.⁶⁾

특히 일관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가의 여부는 정부 및 정당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에게 개혁노선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정책기조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나치게 개혁적이었다’는 응답이 15.8%, ‘기대 정도로 개혁적이었다’는 응답이 13.4%인 반면, ‘기대만큼 개혁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49.2%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은 개혁노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개혁정책의 표류로 인해 발생하는 혼선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강화시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퇴행적 선거운동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선거운동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강화시켰

〈그림7〉 노대통령 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국정방향평가(%)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2차 조사 데이터(2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1) 2차 조사표본 : 1,001명

2)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열린우리당이 선거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전략이 대체로 열린우리당이 개혁정책을 표방하면서 제시했던 자신의 안(案)과 상충됨으로써 응답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2002년 민주당 시절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4년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후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개혁에 소극적이라는 평판을 동원했던 것이 주효했었다. 즉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당내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

하거나 ‘노사모’ 같은 조직을 통해 유권자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의 정치개혁을 선도함으로써 노대통령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부에 대해 비판 일변도로 대응해 온 한나라당과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 즉 양대선거를 개혁 대 반개혁의 정치적 대결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뒤바뀐다.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사건과 17대 총선 패배 이후 천막당사로 이전하는 한편, 2006년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자신이 만들어낸 정치개혁의 대표적 성과물인 국민경선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중앙당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지명하는 소위 ‘전략공천’ 방식을 취하는 등 기존의 개혁이미지와 상충되는 선거운동행태를 보여주었다. 취약지역의 경우 부산의 오거돈 후보나 광주의 조영택 후보, 충남의 오영교 후보 등 참여정부의 각료나 주요 요직을 거친 정치인들을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통해 여당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이 선거 초기 지지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DJ 방북설’을 조심스럽게 흘리거나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수석이 ‘현 정부는 경상도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동원하려 했던 것도 노무현 지지층과 중간층의 이탈을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현 집권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관권선거 음모’나 ‘북풍공작’ 혹은 ‘망국병’이라고 비난한 ‘북한변수 및 지역주의 동원전략’을 스스로 답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진정한 민주개혁정당이라고 스스로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퇴행적 선거운동방식으로 일관하여 개혁성향의 여당 지지층과 중간층의 이탈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문재인 수석의 발언에 대해 충남지역 유권자만 과반수에 못 미쳤을 뿐 나머지 세 개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이 지역주의를 동원하는 발언이라고 평가했

고, 이념적 진보층과 20대·30대 등 현 정권의 지지층에서조차 과반수 이상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계획에 대해서도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과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북한변수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계획은 별 소득을 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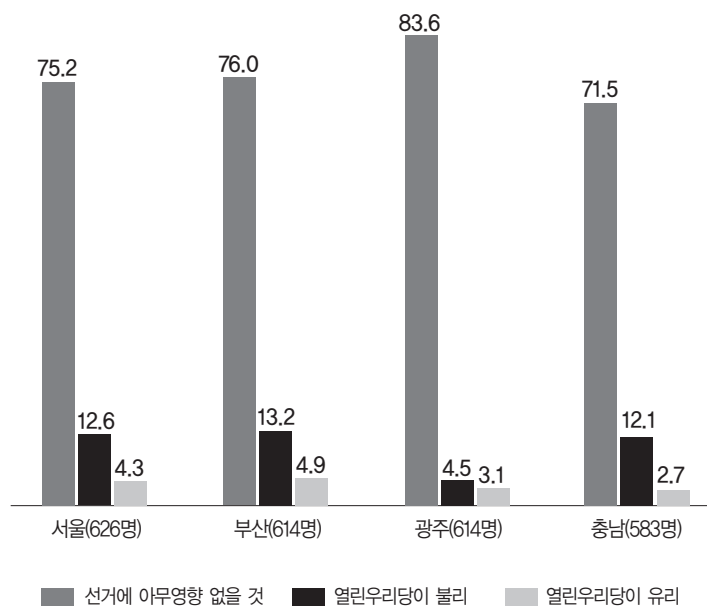
<표8> 문재인 “현 정권은 부산정권” 발언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괄호 안은 %)

4개 지역 통합자료	선거를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이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은 아니다	잘 모르겠다	전체
서울	390 (58.2)	125 (18.7)	155 (23.1)	670 (100.0)
부산	334 (50.1)	225 (33.7)	108 (16.2)	667 (100.0)
광주	326 (50.3)	151 (23.3)	171 (26.4)	648 (100.0)
충남	274 (44.1)	146 (23.5)	201 (32.4)	621 (100.0)
진보	518 (51.4)	289 (28.7)	200 (19.9)	1,007 (100.0)
이념 중도	264 (51.7)	124 (24.3)	123 (24.1)	511 (100.0)
보수	369 (56.1)	123 (18.7)	166 (25.2)	658 (100.0)
20대	340 (56.0)	138 (22.7)	129 (21.3)	607 (100.0)
30대	332 (56.0)	147 (24.8)	114 (19.2)	593 (100.0)
40대	292 (51.2)	148 (26.0)	130 (22.8)	570 (100.0)
50대 이상	360 (43.1)	213 (25.5)	263 (31.5)	836 (100.0)
전체	1,324 (50.8)	646 (24.8)	636 (24.4)	2,606 (100.0)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 여론조사(2006), 2차 조사 데이터(2차 조사 가중치 부여)

〈그림8〉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계획에 대한 평가(%)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4차 조사 데이터(4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8〉 참조).

결론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5·31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실적과 국정운영능력 및 방식에 대한 회고투표를 통해 열린우리당 후보들에 대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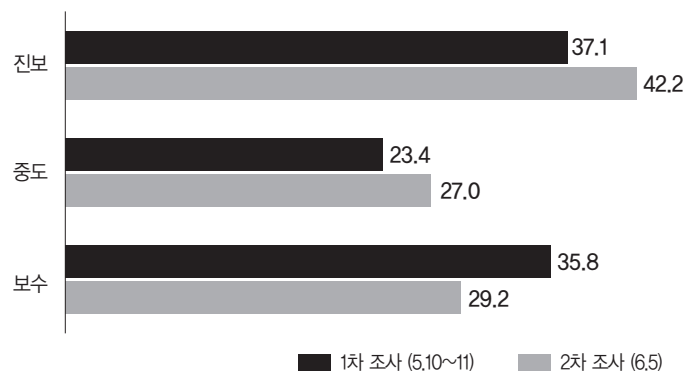
지철회 및 한나라당 후보로의 지지이동이 두드러진 선거였다.⁷⁾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나 비판의식은 개혁노선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일관되지 못한 국정운영방식과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능에 대한 불만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당 지지층의 이탈과 한나라당 지지층의 확대가 새로운 정당지지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정치적 함의를 갖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새롭게 한나라당의 지지층으로 편입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세력으로 보수적인 한나라당을 택한 결과라면 새로운 투표패턴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유권자 이념성향 자체가 보수화된 결과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게끔 이념적 재편이 있었거나 정당일체감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 것이라면 한나라당의 지지층 확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층 이탈현상은 정당과 유권자 간의 새로운 정당지지연합의 재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소위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주관적 이념 위치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만 보면 유권자의 이념적 보수화에 따른 현상임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림9〉를 보면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결과 사이에 오히려 진보층이 늘고 보수층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따로 보고하지는 않지만 1차 전국조사와 2차 전국조사 사이에 패널에서 이탈한 응답자 비율을 보면 진보층에서 20%, 보수층에서 2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늘고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층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드러난 지지선호의 변화가 유권자의 이념적 보수화에 따른 보수정당으로의 선호 변경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2006년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12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당 2

〈그림9〉 주관적 이념성향 분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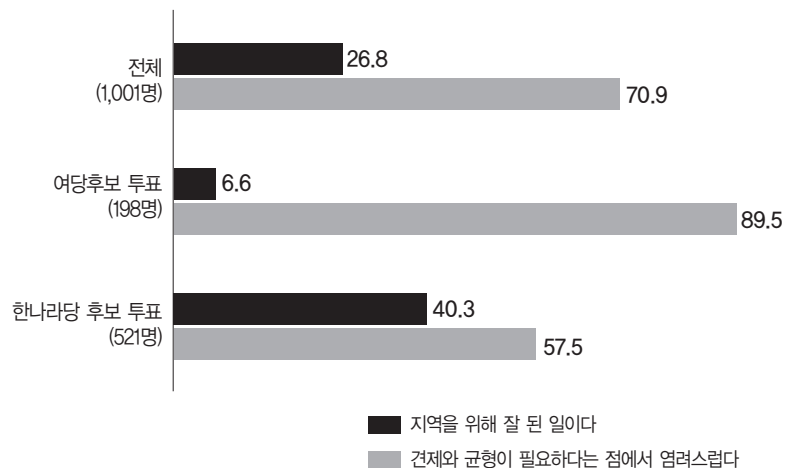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조사 데이터
(1차 · 2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1) 1차 조사표본 : 1,299명, 2차 조사표본 : 1,001명

2)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그림10〉 한나라당 선거독식에 대한 인식(%)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전국패널여론조사(2006), 2차 조사 데이터(2차 조사 가중치 부여)

주) '모름/무응답' 은 표기하지 않음

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9%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는 응답을 하여 한나라당의 시도지사 선거 독식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주목할 점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유권자중에서도 무려 58%가 선거결과에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지방선거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의 유권자 투표선호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해 뒤에 열리는 2007년 대선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론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의 핵심지지층은 누구인가?

이번 패널조사에서 일관되게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가 〈표9〉이다. 이들은 네 차례 조사 가운데 한 차례도 지지선호를 변경하지 않은 핵심지지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분석결과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유지한 사람은 모두 428명이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220명과 447명이었다. 지역마다 결과의 차이가 있지만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유지자의 수가 한나라당 지지 유지자의 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이념적 보수층, 50대 이상의 연령층, 주부층의 지지기반이 두터웠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이념적 진보층, 30~40대 연령층,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직업층의 지지자가 많았다. 열린우리당은 대체적으로 노 대통령 핵심지지층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미 축소된 노 대통령 지지자층의 지지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여권의 지지층 내에서도 노무현

〈표9〉 노대통령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핵심지지층의 특성

(단위 : 명, 괄호 안은 %)

	서울			부산			광주			충남		
	노	열	한	노	열	한	노	열	민	노	열	한
계	79	42	110	98	59	138	134	72	72	117	47	127
성별												
남	44 (55.7)	15 (35.7)	55 (50.0)	51 (52.0)	30 (50.8)	71 (51.3)	63 (47.0)	35 (48.6)	36 (50.0)	57 (48.7)	21 (44.7)	68 (53.5)
여	35 (44.3)	27 (64.3)	55 (50.0)	47 (48.0)	29 (49.2)	67 (48.6)	71 (53.0)	37 (51.4)	36 (50.0)	60 (51.3)	26 (55.3)	59 (46.5)
연령												
29세 이하	26 (32.9)	14 (33.3)	26 (23.6)	29 (29.6)	20 (33.9)	40 (29.0)	38 (28.4)	17 (23.6)	23 (31.9)	30 (25.6)	12 (25.5)	13 (10.2)
30대	25 (31.6)	9 (21.4)	12 (10.9)	21 (21.4)	10 (16.9)	21 (15.2)	42 (31.3)	25 (34.7)	14 (19.4)	26 (22.2)	11 (23.4)	22 (17.3)
40대	10 (12.7)	8 (19.0)	23 (20.9)	26 (26.5)	14 (23.7)	22 (15.0)	14 (10.4)	8 (11.1)	16 (22.2)	29 (24.8)	12 (25.5)	30 (23.6)
50세 이상	18 (22.8)	11 (26.2)	49 (44.5)	22 (22.4)	15 (25.4)	55 (39.9)	40 (29.9)	22 (30.6)	19 (26.4)	32 (27.4)	12 (25.5)	62 (48.8)
학력												
중졸 이하	6 (7.6)	4 (9.5)	17 (15.5)	9 (9.2)	9 (15.3)	20 (14.5)	18 (13.4)	9 (12.5)	11 (15.3)	21 (17.9)	10 (21.3)	31 (24.4)
고졸	16 (20.3)	10 (23.8)	29 (26.4)	34 (34.7)	16 (27.1)	41 (29.7)	36 (26.9)	23 (31.9)	20 (27.8)	45 (38.5)	19 (40.4)	50 (39.4)
대제 이상	57 (72.2)	28 (66.7)	64 (58.2)	55 (56.1)	34 (57.6)	77 (55.8)	80 (59.7)	40 (55.6)	41 (56.9)	51 (43.6)	18 (38.3)	46 (36.2)
직업												
블루칼라	8 (10.1)	2 (7.1)	9 (8.2)	11 (11.2)	4 (5.1)	10 (7.2)	14 (10.4)	5 (6.9)	15 (20.8)	33 (28.2)	17 (36.2)	35 (27.6)
화이트칼라	26 (32.9)	14 (33.3)	22 (20.0)	27 (27.6)	14 (23.7)	27 (19.6)	28 (20.9)	13 (18.1)	8 (11.1)	20 (17.1)	5 (10.6)	16 (12.6)
자영업	9 (11.4)	6 (14.3)	23 (20.9)	14 (14.3)	6 (10.2)	22 (15.9)	15 (11.2)	9 (12.5)	9 (12.5)	12 (10.3)	2 (4.3)	23 (18.1)
주부	18 (22.8)	15 (35.7)	35 (31.8)	24 (24.5)	18 (30.5)	41 (29.7)	41 (30.6)	25 (34.7)	21 (29.2)	33 (28.2)	14 (29.8)	40 (31.5)
학생	11 (13.9)	4 (9.5)	14 (12.7)	17 (17.3)	12 (20.3)	19 (13.8)	21 (11.2)	14 (19.4)	14 (19.4)	8 (6.8)	2 (4.3)	3 (2.4)

	서울			부산			광주			충남		
	노	열	한	노	열	한	노	열	민	노	열	한
소득												
100만원 미만	4 (5.1)	3 (7.1)	3 (2.7)	3 (3.1)	3 (5.1)	16 (11.6)	11 (8.2)	7 (9.7)	9 (12.5)	16 (13.7)	7 (14.9)	26 (20.5)
100~199만원	11 (13.9)	9 (45.2)	16 (14.5)	10 (10.2)	10 (16.9)	21 (15.2)	27 (20.1)	11 (15.3)	12 (16.7)	23 (19.7)	10 (21.3)	26 (20.5)
200~299만원	16 (20.3)	11 (26.2)	18 (16.4)	30 (30.6)	14 (23.7)	37 (26.8)	33 (24.6)	20 (27.8)	25 (34.7)	27 (23.1)	12 (25.5)	34 (26.8)
300~399만원	17 (21.5)	7 (16.7)	31 (28.2)	21 (21.4)	15 (25.4)	22 (15.9)	34 (25.4)	20 (27.8)	14 (19.4)	25 (21.4)	8 (17.0)	19 (15.0)
400만원 이상	26 (32.9)	11 (26.2)	35 (31.8)	30 (30.6)	14 (23.7)	38 (27.5)	22 (16.4)	12 (16.7)	10 (13.9)	16 (13.7)	5 (10.6)	15 (11.8)
이념												
진보	50 (63.3)	25 (59.5)	40 (36.4)	57 (58.2)	37 (62.7)	49 (35.5)	79 (59.0)	45 (62.5)	42 (58.3)	68 (58.1)	55.3 (26)	46 (36.2)
중도	10 (12.7)	7 (16.7)	19 (17.3)	19 (19.4)	11 (18.6)	32 (23.2)	23 (17.2)	16 (22.2)	14 (19.4)	23 (19.7)	10 (21.3)	28 (22.0)
보수	18 (22.8)	10 (23.8)	50 (45.5)	22 (22.4)	11 (18.6)	57 (41.3)	32 (23.9)	11 (15.3)	16 (22.2)	25 (21.4)	10 (21.3)	51 (40.2)

자료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지역패널여론조사(2006), 1차 · 2차 · 3차 · 4차 조사 데이터

대통령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대한 실망이 심각했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열린우리당 핵심지지층이 강하게 결속했다면 선거 국면이 훨씬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한나라당의 핵심지지층 규모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지지층 규모와 비슷하여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열린우리당 고정지지층과 한나라당 고정지지층을 합한 667명은 네 번 모두 조사에 응한 네 지역 2,183명 중 31%에 불과한 수치이다. 2006 지방선거 판세는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선호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패널조사는 이처럼 각 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의 핵심지지기반 뿐 아니라 유동투표의 분석에 장점이 뚜렷한 만큼 향후 정당지지연합의 변화와 유동층 투표분석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투표의사의 변화와 투표참여

서 현 진

- 1) 4차 조사에서는 기권자를 제외했기 때문에 빈도수가 3차에 비해 줄어든다. 이는 네 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3>에서 <표6>은 공히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 2) 1차 조사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후보는 진선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 3)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에 대해서는 Alvarez and Nagler(2000), Saunders et al.(2005)을 참조할 것.
- 4) 열린우리당은 선거 초반 야당의 노무현 정부 심판론에 맞서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론으로 맞섰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선거 막바지에 열세가 뚜렷해지자 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5일에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싸움이 저지'를 '읍소'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한겨레신문 06/05/26).
- 5) 선거운동의 활성화가설에 대해서는 김장수(2005) 및 이 책의 1장과 6장을 참조할 것.
- 6) 2007년 들어와 정부가 일관되게 한미FTA 추진정책을 이슈화하여 추진한 결과 기존 지지층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1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을 30%대까지 다시 끌어올리게 된 것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국정운영능력과 일관된 추진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이슈와 합의의슈(valence issue)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내영·정한울(2007)을 참조할 것.
- 7) 회고투표 이론에 대해서는 이 책의 9장을 참조할 것.
- 8) 중대선거 이론에 대해서는 키(Key 1955)를 참조할 것.

서론

민주화 이후 선거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당면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정당과 정치인을 선출하는 한편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선출된 대표는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정책의 추진과 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자신이 수행한 정책적 성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방적 수준에 국한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권자가 되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구성의 기본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보다는 전국적 수준에서 중앙정부와 당에 대한 중간평가 장치로서의 성격을 띠어 왔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 수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